

민생 앞세워 파국 피했지만...사개특위 구성 등 뇌관 여전

여야 '국회정상화 협상' 막판 타결 '민생 방치'·野 '입법 독주' 부담 '상임위원장 합의' 등 쟁점 수두룩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민생 경제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5일간의 국회의장단-상임위 공백 사태가 해소되며 21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했다. 또 국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5선)과 민주당 김영주 의원(4선)을 선출했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으로,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민주당은 한 달 넘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인내를 거듭해왔다"며 "초대형 복합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오늘부터 민생을 가로막는

벽들을 하나씩 허물어 나가겠다"며 "이제 개점 휴회 상태를 끝내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민생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유류세 인하, 밥값 지원법과 같은 시급한 입법과 인사청문회 등 현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엔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법사위와 예결위의 정상화를 통한 국회 개혁과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선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가 참여한 '2+2 회동'을 심야까지 벌였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며 합의는 불발됐다. 급기야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에

게 돌리며 공방전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한다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자 협상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 직전 통화를 했으며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파국은 막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날 합의의 전제조건인 '상임위원장 합의'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대치 국면을 재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실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직 배분을 두고 민주당은 양보 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지구심사권 조정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협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취하 등을 내걸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의장단 선출엔 협조할 수 있지만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양보할 수 없다고 뜻을 박아 불화의 씨앗을 남겼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 사개특위 구성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재논의하거나 여야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선서하는 보궐선거 국회의원 당선인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 6·1 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한구, 국민의힘 박정하 안철수 김영선 최영희 이인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박지현, 민주 전대 출마 무산...비대위 "예외 안돼"

"김동연 사례와 박지현은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월 전당대회 출마에 요건 불충족으로 무산됐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출마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이나 공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임당한 관리당원이어야 하는데, 지난 2월 14일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박 전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개인을 위한 특혜를 요구한 것"이라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결국 비대위는 이런 비판 여론까지 고려해 박 전 위원장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 전 위원장이 (당무위 의결을) 논의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적으로 신청하면 다시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논의한 부분들에 따르면 같은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비대위원들이 투표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통일했다"고 부연했다.

박 전 위원장이 과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방선거 출마 과정을 선례로 들어 의결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합당을 전제로 당의 후보로 출마하게 된 김 지사의 사안과 이 사안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 당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국민 여론조사 비중 늘려

선거인단 비중 '대의원 30%·권리당원 40%·일반국민 25%·일반당원 5%'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28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했다. 또 선거인단 비중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로 변경했다. 기존보다 대의원 투표 비중을 15%포인트 줄이는 대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그만큼 늘린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4일 전제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당대회 료를 확정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체제를 변경할 이유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의원 비중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0%에서 25%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 대표 경선 흥행을 위해 예비경선 당선인 수를 (후보자자) 4인 이상일 경우 3인, 9인 이상일 때는 8인으로 정했다"며 "예비경선 투표시 당 대표는 1인 1표, 최고위원은 1인 2표를 적용하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준위는 예비경선 선거인단의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앙위원만 예비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안 위원장은 "수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둘 다 적용된다"며 "후보 결정 단계에서부터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준위는 최고위원 권한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심의된 합의의든 협의든 의결이든 그것은 운영 주체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위원 권한 강화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제9대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했다.

광주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22명(전체 23명)은 4일 시의회에서 총회를 열고 부의장(2명)과 상임위원장(5명) 후보를 결정했다. 부의장에는 심철의(서구 4)·이귀순(광산 4)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의장 후보는 지난달 30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선의 정무창(광산 2) 의원으로 결정됐다.

운영위원장은 강수훈(서구 1) 의원이, 행정자치 위원장은 임미란(남구 2) 의원, 환경복지위원장은

조석호(북구 4)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김나운(북구 6) 의원, 교육문화위원장은 신수정(북구 3) 의원이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수훈 의원만 초선이고, 나머지 위원장들은 재선 의원들이다.

민주당은 재선과 초선, 남성과 여성 비율을 고려해 선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제9대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22명, 국민의힘 1명(비례)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모두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